

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9. 6. 24.(월) 10:30 (인터넷·온라인 : 2019. 6. 24.(월) 10:30 이후 보도 가능)		
배포일시	2019. 6. 24.(월)	대변인실	044-203-6581
담당과	사학감사담당관	과장 최기수, 사무관 이광태(044-203-6337)	
	양성평등정책담당관	과장 김지연, 사무관 고정표(044-203-7111)	
	교육신뢰회복담당관	과장 박재성, 사무관 민병성(044-203-6661)	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교육부, 『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』 개최

- ① 7월부터 수도권 주요대학을 시작으로, 2021년도까지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
- ② 성신여대 성비위 교수 관련 사안 조사 실시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6월 24일(월) ‘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’ 결과를 발표하였다.

<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관련 >

□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부총리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구성하여 회계, 입시·학사 등 중대 교육비리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감사하고,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.

○ 또한, 교육비리 및 공익제보를 위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, 중앙부처 최초로 시민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였으며,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권익위, 검·경 등과 공조체제도 강화하였다.

□ 이러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국민들의 염려는 높다.

○ 그러기에 사안 발생 시에 더더욱 엄정한 대응과 함께 사전 예방과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.

□ 이번 종합감사 확대는 사학비리 근절과 교육의 공공성·투명성 강화를 통해 사학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·책무성을 강화하여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,

○ 개교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수 6천명(‘18. 4. 1. 학부정원 기준)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.

※ 개교이후 종합감사 미수감 사립대학 111개교(대학61, 전문대50) 중 학생 6천명 이상 16개교

※ 사립대학 감사대상은 대학(152개교), 전문대학(126개교)이며, 대학원대학(42개교) 및 사이버대학(대학 18개교, 전문대 3개교) 포함시 총 341개교임

○ 전문대학은 예년 수준(1~2개교)으로 실시하되, 입시, 학사, 회계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우선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.

□ 또한, 앞으로 사학감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연간 종합감사 대상 기관수를 점차 확대(‘18년 3교 → ‘19년 5교 → ‘20년 10교)해 나가고,

○ 국민신고센터 및 사학비리·부패신고센터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하여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.

□ 이와 더불어,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과제(7.3.예정)를 종합하여 사학감사 실효성 확보,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다.

< 성신여대 성비위 교수 조사 관련 >

□ 교육부는 2018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학생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자대학교를 대상으로 사안 조사를 실시한다.

< 사안조사 개요 >

- 조사 기간 : '19.6.26.(수)~7.5.(금) (총 8일)
- 조사반 구성 : 4명 내외(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주관)
- 중점 조사 내용
 - A교수의 성비위 사실 여부 및 징계 사유 해당 여부
 - 학교의 징계 및 인사 절차의 적정성

- 이번 조사에서는 **A교수의 성비위 해당 여부 및 성신여대의 사안 처리과정과 징계·인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** 할 예정이다.
 - 조사결과 **A교수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**하는 경우, 「**사립학교법**」에 따라 **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구**하고, 필요시 해당 교수를 **수사 의뢰**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.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**사학혁신은 일부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단**조치하고, 종합적으로는 **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단계적인 제도개선 추진이 핵심**”이라고 강조하며,
 - “우리 정부의 사학혁신의 목표는, **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관리**하고, **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강화**하는 것”이라고 설명하였다.
 - 또한 유 부총리는, “**학내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부가 엄정하게 조치**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 이광태 사무관(044-203-6337), 양성평등정책담당
관실 고정표 사무관(044-203-7111), 교육신뢰회복담당관실 민병성 사무관
(044-203-66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